‘3시 하교제’ 공론화 보류… 교육계, 수업연장 의견 엇갈려

국교위, 신중론 우세… “준비 필요”
교원단체 “수업 연장은 해법 아냐”
돌봄공백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위원회 제12차 회의. /뉴시스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이른바 ‘3시 하교제’가 공론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지만, 정규수업 연장의 필요성을 두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견플랫폼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연내 마련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3시 하교제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3시 하교제는 통상 오후 1시 전후인 초등 1·2학년의 정규수업 종료 시각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다.

◆국교위 “정책 구체성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장은 학생의 발달과 건강, 교사의 업무 부담, 교원 확충과 시설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영 위원도 공론화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정책을 다시 설계한 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보미 위원은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3시 하교제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김용 위원은 “정책이 제목 수준으로만 공개돼 찬반이 엇갈렸다”며 “절차 기간(6~9개월) 안에 방안을 만들어 의견을 묻자”고 주장했다. 김건 위원은 청원 절차와 별개로 돌봄 문제를 포함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 돌봄 한계→‘3시 하교제’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수업 연장안이 거론되는 것은 현행 공적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공적 돌봄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안정성과 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교위·한국교육개발원과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릴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연구진은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돌봄 공백은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정별 여건이 달라 보편적인 해결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 “기존 돌봄체계 보완을”

교원단체는 정규수업 연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교 시각부터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놀이와 휴식도 필요하다”며, “학생의 피로와 학교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기존 방과후·돌봄체계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의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3시 하교제 공론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론화는 보류됐지만, 초등생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다. 정규수업 연장과 기존 돌봄체계 보완 가운데 어떤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학생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후속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수능 창시자의 탄식… “없애는 것이 낫다”

다큐멘터리 ‘수능 창시자’ 시사회
“사회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설계한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0여 년이 흐른 현재의 수능을 두고 내놓은 평가다.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를 대체하고 사고력과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발한 수능은 당초 구상과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이 지난 10일 시사회를 열었다. 백진우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수능 도입을 주도한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중심으로 시험의 탄생 배경과 이후 대입제도의 변화를 추적한다.

영화는 수능이 기존 학력고사의 대안으로 구상된 과정을 짚는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수능은 학력고사가 여러 교과의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고르는 방식에 치우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수리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은 초기 구상과 달랐다.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과 사교육의 대응, 학계의 반발 등 여러 요구가 반영되며 평가 범위와 방식이 수차례 바뀌었다. 대학이 수능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삼자 사고력 평가를 지향한 시험은 학생을 줄 세우는 역할까지 떠안았다.

수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공정성과 변별력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이날 시사회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동국대 민세진 경제학과 교수는 “선호 대학의 정원이 제한된 만큼 학생 간 변별은 피하기 어렵고, 모두가 같은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공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을 비판하려면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력고사와 수능을 모두 경험한 당사자이자 현재 자녀의 입시를 치르는 학부모인 강상우 씨는 문항 하나의 난이도로 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수능은 암기보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변별력을 이유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이 학력고사 시절과 얼마나 다른지 되물으며, 수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30~40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제도를 바꿔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교육이니까 따라오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입시와 시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하며, 제도를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앞서 시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날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백 감독은 “수능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며, 영화를 통해 교육과 입시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강대, 국가 핵심기술 전문인재 키운다

KIST 공동연구·인재양성 업무협약

서강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협력한다.

서강대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에서 KIST와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의 공동연구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인력 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과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T의 임무중심연구소 7곳 중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 연구소 3곳과 연계한다. 해당 연구소들은 서강대 교수 및 학생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시설도 함께 활용한다.

서강대는 우수 학생들을 연구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지난해 판교에 조성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를 반도체 분야 현장 교육 및 산학 협력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서강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의 공동연구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심종혁 서강대 총장, 오상록 KIST 원장. /서강대

심종혁 총장은 “학생들이 국가 핵심 연구에 참여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한양사이버대, 일반·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내달 11일까지… 건축도시공학과 등 선발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양사이버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7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석사 340명, 박사 100명이다. 일반대학원은 건축도시공학과, 교육공학과, 기계IT융합공학과, 디자인기획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 아동학과 등 8개 학과에서 선발한다.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학과 내 마케팅·재무회계세무·IT경영 등 3개 트랙을 운영한다.

전형은 서류평가와 구술평가로 치러진다. 석사 과정은 학부 성적과 학업계획서, 박사 과정은 학부·석사 성적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구술평가는 다음 달 19~20일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28일 발표한다.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4~6일이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운영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한양대학교 도서관과 강의실, 체육관 등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군위탁·산업체위탁 전형 등은 입학금을 면제하고, 별도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한양대 동문·가족 장학 대상자는 1년간 수업료 20%를 감면한다.

지원은 대학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센터는 입학 일정과 전형 등을 안내하는 전용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7학년도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김수정 기자

고려대, 차세대 나노의학 비전 모색

‘Next Intelligence Symposium’ 개최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차세대 나노의학의 비전을 모색한다.

고려대는 오는 13일과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유임순홀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 ‘Next Intelligence Symposium 2026, NOVA’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구조 나노의학 혁명’으로, 분자 설계 기술을 약물 전달과 면역치료 등 차세대 의료 기술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하버드 의대, 노스웨스턴대, 텍사스대(오스틴 캠퍼스), 애리조나주립대 등 해외 유수 기관의 석학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반응성 분자 구조, 생체재료, DNA 기반 바이오디자인 등 나노기술의 연구 성과와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고려대에서는 김종승 화학과 교수가 ‘광역학 진단·치료를 위한 분자공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KU-KIST융합대학원 이승우 교수는 ‘DNA 오리가미와 금 나노입자를 활용한 나노광학·양자광학 연구’를 발표한다.

연구진 네트워킹도 마련한다. 16일에는 고려대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 연사들과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바이오센서·약물 평가·재생의학·면역학 등 분야별 협력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